

#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코로나19 긴급대책 요구안

2020. 04. 03 빈곤사회연대

## ① 강제퇴거를 전면 금지하라!

- 노점상, 철거민에 대한 강제철거와 집행을 금지하라
- 노숙인에 대한 강제퇴거초지 금지하라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따른 퇴거조치를 중단하라

## ② 집 없는 이들의 주거권을 긴급히 보장하라!

- 안전하지 않은 집에 살거나, 살 곳이 없는 이들에게 주거를 보장하라
- 생활시설 및 요양병원 수용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 보장하라

## ③ 기업과 금융시장엔 100조, 사람에게엔 10조? 사람을 먼저 구제하라!

- 예산을 대폭 확대해 소득을 상실한 모든 이들에게 안정적인 소득보장대책 마련하라
- 공적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해고, 부당한 초과이익 행위를 감시하라
- 기존 빈곤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라
- 코로나로 인한 모든 상황을 긴급지원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보고 지원하라

## ④ 공공임대주택부터 반값 임대료 시행하라

- 다주택자의 임대소득과 집값 상승에 따라 증식된 자산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고통분담비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임대료를 인하하라
- 공공임대주택부터 반값 임대료를 시행하라

#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코로나19 긴급대책 요구안

- 코로나19는 인간 모두를 감염시키지만, 가장 약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위태롭게 만들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98%의 감염률,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약한 고용관계에 있던 이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었고, 출근을 거절할 수 없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과 택배기사의 사망이 있었다. 좁은 원룸에서 자가 격리해야하는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고, 활동지원사를 찾더라도 서로의 거리를 2미터로 확보할 수 없었다. 쪽방과 고시원 생활자는 벽은 있으나 타인과의 거리를 확보하거나 개별 위생시설을 갖출 수 없고, 거리 홈리스는 무방비상태에 빠졌다. 급식은 중단되었고, 시설이용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은 누군가에겐 재앙이 되었다.
- 이 불평등한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치료 그 자체에만 있지 않다. 현재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는 현재의 불평등을 더욱 깊고 암담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대규모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수용하고 기업회생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IMF의 경험은 더 공고한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해 100조의 자금이 활용되는데, 왜 사람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100조의 자금을 투입하지 못한단 말인가? 방역을 위해 이렇게 강력한 지침을 수용하는 국가는 왜 당장 쫓겨나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단 말인가?
- 코로나19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급한 과제를 제안한다.

## ▲ 첫째, 강제퇴거를 전면 금지하라!

- 노점상, 철거민에 대한 강제철거와 집행을 금지하라
- 노숙인에 대한 강제퇴거초지 금지하라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따른 퇴거조치를 중단하라

- 3월 30일 대구에서는 대구 동인동에서는 강제철거가 집행되었다. 서울역에서는 코로나19 대책이라는 이유로 서울역 안 의자를 철거하며 홈리스가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을 줄이고 있고, 서울 중구 양동의 쪽방 지역은 개발이 진행되기도 전에 세입자를 위협하며 내쫓는 예비 퇴거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현재도 노점상, 철거민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는 지속되고 있다. 이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개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을 앗아가는 행위이다.

- 이러한 강제퇴거는 집회시위 자제요청, 감염예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 결정과 궤를 함께 한다. 대구 동인동에서 철거민들의 집회신고는 반려되었지만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강제집행은 허가받았다. 3월 2일 철거가 집행 된 서울 천호동에서는 철거용역이 본인은 00지역<sup>1)</sup>에서 왔으며 침을 뱉고 바이러스에 감염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수원의 노숙인 생활시설은 감염 예방을 이유로 일자리를 구한 홈리스의 퇴거를 종용했다.
-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현재 상황을 이용해 일어나거나, 노점상에 대한 혐오정서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바이러스 상황을 기회로 보고, 5일장/10일장 등의 철거를 청원하는 일부 지자체의 위협은 사람을 바이러스 취급하는 반인권적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점상의 일자리를 뺏는 무척 잔인한 행위다. 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되, 바이러스를 핑계로 생존의 자리를 박탈하는 것은 심대한 기본권 박탈이라는 점을 견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면적 강제퇴거행위 금지조치를 발동해야 한다.
- 주택문제와 퇴거통보가 잦은 뉴욕주를 비롯한 세계도시는 코로나19 이후 강제퇴거 전면 금지를 선언(eviction moratorium)했다. 임대료 연체나 주택법원에 고발된 일체의 소송에 따른 퇴거결정을 코로나 종식까지 일제히 중단한 것이다.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이들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자신의 공간에서 퇴거마저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강제퇴거 전면 금지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 ▲ 둘째, 집 없는 이들, 집이 안전하지 않은 이들, 시설에 갇힌 이들의 주거권을 긴급히 보장하라!

-안전하지 않은 집에 살거나, 살 곳이 없는 이들에게 주거를 보장하라

-생활시설 및 요양병원 수용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 보장하라

- 감염예방을 위한 첫 번째 수칙은 타인과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라는 것이지만 이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거리의 홈리스와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시설 주민들, 안전하지 않은 집에 있는 이들, 각종 생활시설과 요양병원에 '갇힌' 사람들이다. 여분의 집에 스스로를 격리하고 자가용으로 이동한 확진자는 칭송되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 청도 대남병원 102명의 환자 중 100명의 감염이 확인 된 이후, 대구에서는 요양병원 입원자와 노동자, 일반병동 환자를 비롯해 224명의 집단 발병이 또다시 발생했다. 늑거나 아프고 가난할 때 찾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공간인 요양병원은 사실상 생활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집단 수용시설은 사람이 살기에도 취약하지만 감염에는 더 취약했다는 것이 매일 드러나고 있다. 벽이나 지붕조차 없이 살아가는 홈리스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

1) 당시 집단감염이 발발한 지역

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우리는 생활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홈리스를 위한 주거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지난 3월 17일 통과 된 2천억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을 추경했지만 선정기준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재산기준 완화에 그쳐 매우 미흡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 현재의 상황은 적절한 주거를 위협받는 모든 이들에게 긴급한 위기 사유다. 현재의 강박한 위기사유 제한<sup>2)</sup>을 넘어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긴급복지예산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동원해 주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주거박탈상태에 놓인 모든 이들의 긴급한 주거지 확보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설생활자와 비적정주택 거주자, 거리홈리스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주거를 조건 없이 제공하라.

## ▲ 셋째, 기업과 금융시장엔 100조, 사람에겐 10조?

### 사람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하라!

- 예산을 대폭 확대해 소득을 상실한 모든 이들에게 안정적인 소득보장대책 마련하라
- 공적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해고, 부당한 초과이익 행위를 감시하라
- 기존 빈곤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라
- 코로나로 인한 모든 상황을 긴급지원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보고 지원하라

- 정부는 전국민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 지급단위를 가구로 기준 삼는 것, 선별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대책의 핵심 문제는 너무 적은 예산만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100조를 투자하는데, 개인의 파산을 막는 데는 왜 100조를 투자하지 않는가? 현재 소득을 상실한 모든 이들에게 소득을 상당히 대체할만한 실업수당을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 종식 때까지 이어지는 안정적인 소득보장대책을 마련하라. 더불어 공적자금을 투여 받은 기업에 대한 해고, 부당한 초과이익 달성이 없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 현재 각종 수당이 논의되고 있지만 기존 복지 사각지대를 버려둔 채 소액을 지원하는 것은 밀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여러 차례 선언했지만 지금도 이행되지 않은 부양의무자기준을 즉각 폐지해서 기존 사각지대 해소를 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 일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경기부양과 위기 극복을 위해 수십조의 예산을 투입하며 가장 시급한 빈곤문제를 이번에도 외면할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을 즉각 폐지하고, 긴급 지원의 위기사유를 전면 확대하라.

- 현재 지역별로 시행되는 다양한 재난수당은 모습과 이름을 달리하지만 추가적인 소득 제 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기 초연금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 대상자를 제외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을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비국적자 전원을 배제하고, 충남도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노 점상을 배제한다. 보편지급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이들을 우선 배제 하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 ▲ 넷째, 공공임대주택부터 반값 임대료 시행하라!

-다주택자의 임대소득과 집값 상승에 따라 증식된 자산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고통분담비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임대료를 인하하라

-공공임대주택부터 반값 임대료를 시행하라

- 3월 30일 대구에서는 한 자영업자의 분신시도가 있었다. 600만원의 임대료가 밀려 힘들 다고 토로했다는 그는 죽음의 문턱에 서있을 것이다. 정부는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임대인’ 의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한가로운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임대소득은 불가침의 영역 이 아니다.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67%를 독식하고 있는 사회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과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증가는 코로나19 사태해결을 위한 고통분담비용에 기꺼이 쓰여야 한다. 정부는 임대인의 임대소득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라. 이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부터 임대료 유예가 아닌 반값임대료 시행으로 답하라.
-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은지 10년이 되어가지만 50%의 국민들은 평균 3.4년마다 이삿 짐을 싸는 신세대. 지난 10년간 건설된 주택 490만호 중 절반인 250만호는 이미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은 1인당 7채로 10년 전에 비 해 두 배 증가<sup>3)</sup>하였다. 문제는 얼마나 생산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고 분배하는가 에 있다.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사회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생산한 모든 가치는 모두 임대소득자의 주머니로 돌아간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대다수 국민의 생존이 벼랑에 내몰린 지금,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시도에 나서지 않는다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더 참담한 불평등의 세계가 될 것이다.

- 생존에 내일은 없다. 오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나서라. 경제위기의 고통분 담은 더 이상 서민들의 몫이 아니며, 이윤을 독식해온 자들이 져야 하는 마땅한 책임임을 선 언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이 세계의 불평등을 더 잘 목격할 수 있었다. 이 세계를 유 지해온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바이러스가 종식되더라도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은 없다.

3) <다주택자 상위1% 주택소유 현황 발표>, 경실련 (2019.9.24.)